

뉴스 담론의 구조와 의미 구성

—'97년 '한보 사태' 보도에 대한 반 다이크 분석틀 적용을 중심으로

백선기 · 곽영선

1. 서론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997년 1월 23일, '한보철강 부도'(이후 '한보 사태')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나 언론의 태도는 여전히 이전의 정경 유착 사례들을 다루던 방식을 따르고 있었다. 전체적인 과정은 검찰이 관련 정치인과 기업가를 소환 조사하고 사법 처리하는 수순을 밟는다. 그 과정에서 언론 보도는 혐의 사실을 부인하는 정치인들의 모습과 부도덕한 기업가 개인에 대한 기사들을 보도한다. 어찌 보면 상투적인 이런 언론의 보도 태도는 정권마다 반복되는 정경 유착 현상의 핵심 원인과 그 책임을 중심으로 다루기보다는 다만 뉴스 가치가 높은 유명한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에 관한 보도들을 주되게 다루고 있다. 한보 사건의 경우 언론의 보도 태도는 '정태수'라는 일 개인과 사건에 관련된 거물급 정치인 2~3명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유명처럼 떠돌아다니던 정태수 리스트는 정치권을 혼란 상황으로 몰아갔고 언론은 이런 동요하는 정치권 동향을 보도하기에 급급했다.

언론의 이러한 보도 태도의 원인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일반적

으로 뉴스는 사회 구조 내에서 매체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기호 체계에 의해 발생하는 담론으로 파악되며, 뉴스 담론은 그것의 생산을 둘러싼 사회·문화적인 컨텍스트 속에서 사건을 특정한 의미로 해석하고 재구성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다. 미디어 뉴스의 가장 명백한 속성 중의 하나는 뉴스가 특정한 담론의 양식을 구성한다는 점이다. 즉, 미디어 담론, 특히 뉴스 보도는 언어 사용 및 텍스트의 특정한 양식들 나아가 사회·문화적 실천의 구체적 종류들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뉴스는 뉴스를 생산하는 기자나 편집부의 특정 현상에 대한 사회적 인지, 언론사의 사회·문화적 기능, 언론사의 정치·경제적 조건, 뉴스에 대한 수용자의 해석에 관여하는 사회적 인지, 이 모두가 컨텍스트로 작동하는 하나의 담론이다. 따라서 뉴스 담론은 객관적 사실만을 투명하게 전달할 수 없으며, 뉴스 제작과 수용 과정에서 특정한 시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정한 시각이란 뉴스의 제작과 수용 과정에 개입하는 모든 사회적 인지라고 할 수 있는데, 뉴스 담론은 특정 집단의 사회적 인지와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생성되고 수용된다. 또한 역으로 생성된 뉴스 담론은 사회적 인지를 재생산·합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뉴스 담론은 특정 사건의 여러 가지 속성들에 대한 선택과 배제를 통해 구성된다. 사건의 속성들에 대한 선택과 배제를 통해 구성해내는 특정한 시각은 사회 구성원들의 사건 인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사건 자체의 전개 및 결말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신문 보도에서 '한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취하고 있는지의 문제는 사건 자체와 보도를 접하는 독자들의 사건에 대한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보 사태'와 관련된 담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그 담론의 의미를 여러 층위의 컨텍스트 속에서 규명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I. 반 다이크의 뉴스 담론과 의미 작용

뉴스 보도는 특정 유형의 담론을 형성한다. 뉴스는 한 사회와 문화가 허용하고 동의하는, 즉 한 사회의 상식적인 보편성에 기반을 둔 하나의 상징 체계로 간주된다. 다시 말해 뉴스는 기자나 독자라는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나 문화의 관계를 통해서 의미 작용을 하는 사회 문화적 담론으로 간주될 수 있다. 매스 미디어가 현실과 인간을 매개하는 상징 조작이라고 할 때 수용자가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가 하는 문제는 매스 미디어가 현실을 어떻게 중재하는가라는 문제와, 수용자가 미디어의 메시지를 어떻게 의미화하는가라는 문제를 동시에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한 사회과학 연구들은 주로 경제·정치·사회·심리학적인 측면들에 집중되어왔다. 이런 연구들은 뉴스 생산의 조건에 대한 중요한 시각을 제공했고 매스 미디어 보도의 이용이나 효과에 대한 중요한 시각들을 제공했다. 이런 연구들에서 메시지는 단순히 정보 제공의 측면에서만 다루졌다. 이에 반해 미디어 담론, 특히 뉴스 보도는 언어 사용, 텍스트, 특정한 사회 문화적 실천의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반 다이크 van. Dijk는 뉴스란 본질적으로 그것이 생성되는 사회·문화·정치뿐 아니라 기자, 나아가 수용자들의 심리까지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는 복합적 산물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한다.¹⁾ 따라서 어느 특정 요소만을 강조하는 방법으로는 뉴스의 본질을 설명하기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뉴스가 어떻게 선택되고, 어떤 관점으로 서술되고, 또 어떻게 표현되는가

1) T. A. van Dijk(1988), *Neus Analysi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 2.

등 뉴스의 담론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담론 분석이 단순한 텍스트 분석만이 아니라 텍스트에 대한 인지적·사회적·문화적·역사적 컨텍스트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텍스트 생산과 수용자의 이해 과정, 언어 사용자간의 상호 작용, 담론의 사회적·문화적 기능 등이 담론 분석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뉴스 텍스트는 구조적 형태 분석과 더불어 저널리스트의 뉴스 생산 과정과 독자들에 의한 뉴스 이해를 연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담론과 사회의 관계는 직접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공유된 지식·신념·태도·이데올로기들로 표현되는 사회적 인지 social cognition의 중재로 연결된다. 뉴스 담론은 특정한 사회적 인지들을 형성시키는 데 일정 부분 관여하고 사회적 인지들은 개인과 사회를 연결짓는 것이다. 사회적 인지라는 개념은 심리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 시각, 상호 작용의 수준, 그리고 집단·제도 또는 다른 사회적 구조들의 수준과 연계되는 개념으로서 사회적인 개념이다. 사회적 인지는 사회적 상황에서 채택되고, 사용되고, 변화한다. 그리고 담론은 사회의 발달과 변화에서 작용하는 주요한 자원들 중의 하나다. 어떠한 사회적 행위와 실천, 그리고 권력·지배를 둘러싼 집단의 관계도 사회적 인지나 담론 없이 고려될 수 없는 것이다.²⁾

이런 사회적 인지는 직접적으로는 담론과 관련하여 '컨텍스트'로 지칭되는데, 흔히 컨텍스트는 사건, 행위, 담론을 둘러싼 주변 상황이나 환경을 말한다. 담론 연구에서 컨텍스트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다. 추상적인 담론 분석과 사회적 담론 분석의 가장 주요한 차이점은 후자가 컨텍스트를 고려한다는 점이다. 컨텍스트에는 시간·장소 같은 상황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참여자 및 그들의 역할과 목적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모든 사회적 상황의 속성들이 컨텍스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잠정적으로 컨텍스트는 담

2) David Crowley & David Mitchell(1994), *Communication Theory Today*, Polity Press.

론과 체계적으로 연관된 사회적 상황의 속성들의 구조로 정의할 수 있다. 담론은 컨텍스트에 의해 조건지워지지만, 또한 컨텍스트에 영향을 미치거나 컨텍스트를 구성한다. 즉, 담론은 컨텍스트의 일부분이고 각각의 담론은 상호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³⁾

담론을 커뮤니케이션 행위와 상호 작용의 과정으로 규정한다면, '행위'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행위자의 의도나 목적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담론과 권력의 관계가 중요해진다. 흔히 사회적 권력은 헤게모니로 설명되는데, 헤게모니는 사람들이 마치 권력 구조가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것이며, 또한 자신들이 동의해서 행위하는 것처럼 느끼도록 만든다. 여기에는 어떤 명령이나 요구도 필요치 않다. 바로 이런 헤게모니가 담론 권력의 행사 방식인데, 교육, 정보 캠페인, 선전 및 수많은 미디어 공공 담론을 통해서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따라서 담론은 권력의 행사에서 하나의 수단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권력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⁴⁾

담론에 대한 통제를 통해서 여타의 것들을 통제하기 위해 권력 집단은 가장 효과적인 담론 특성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통제는 내용이나 형식뿐만 아니라 컨텍스트에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사회-경제적 분석은 어떻게 담론의 제작 기구의 소유가 담론의 통제와 연관되는지 설명할 수 있다. 담론 제작 기구의 소유주들은 편집자들에게 무엇을 게재하고 게재하지 않을지에 대하여 통제한다. 권력은 특정 집단에게 독점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권력 집단들과 공유되어 있다. 미디어와 저널리스트 그리고 주요 분야의 엘리트들과의 연계는 권력이 단순히 귀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권력 집단들에 걸쳐 공유되고 분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권력 관계는 복잡하다. 상하 수직적인 억압이나 설득 대신에 다양한 공유·협상·담합의 양상이 발견되기도 하고, 권력 집단들 사이의 권

3) T. A. van Dijk(1996), "Discourse as Interaction in Society," *Discourse as social interaction* Vol. 2, SAGE Publications, p. 11.

4) T. A. van Dijk(1988), pp. 20~21.

력 분점도 발견하게 된다. 동의 창출과 형성 과정에서 사회 관계들은 복잡한 협상·담합·공동 생산의 양상들을 띠게 된다. 그러나 집단의 사회적 권력이 획일적이고,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아무런 갈등 없이 행사되는 것도 아니다. 사회적 권력은 일상적으로 담론을 통해서 행사되고 집행된다. 그런 개별적 권력 행사는 서로 차이가 있고 변화할 수 있다.

II. 반 다이크의 뉴스 담론의 의미 구조

반 다이크는 뉴스란 본질적으로 그것이 생성되는 사회·문화·정치뿐 아니라 기자, 나아가 수용자들의 심리까지 다양하게 연계되어 있는 복합적 산물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어느 특정 요소만을 강조하는 방법으로는 뉴스의 본질을 설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뉴스의 명시적 측면보다는 함의적 측면이 더 중요하다는 시각도 곁들여져 있는데, 즉 뉴스가 어떻게 선택되고, 어떤 관점으로 서술되고, 또 어떻게 표현되는가 등 뉴스의 담론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담론 분석이 단순한 텍스트 분석만이 아니라 텍스트에 대한 인지적·사회적·문화적·역사적 컨텍스트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텍스트 생산과 수용자의 이해 과정, 언어 사용자간의 상호 작용, 담론의 사회적·문화적 기능 등이 담론 분석의 주요 연구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 다이크가 담론을 커뮤니케이션 사건이나 커뮤니케이션 행위에서 가장 잘 파악될 수 있는 언어적 형태와 의미, 그리고 행위의 복잡한 단위라고 정의했을 때, 커뮤니케이션 사건이나 커뮤니케이션 행위라는 개념은 사회적·경제적 컨텍스트가 그 구성 요소들이라는 것을 함축한다. 그러므로 담론의 실체는 텍스트 요소와 컨텍스트 요소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담론 분석은 텍스트 분석뿐만 아니라 텍스트와 이야기 사이의 관계와 인지적·사회적·문화적·역사적 컨텍스트들을 연구해야 한다. 즉, 텍스트 요소가 각각의 수준에서 뉴스 담론의 다양한 구조를 체

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라면, 컨텍스트 요소는 인지적이고 사회적인 요소나 조건·제약, 또는 텍스트 구조의 결과와 또 간접적으로 그들의 경제적·문화적·역사적 인지의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담론 분석은 더 고차원적이고 전체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전체적인 수준은 담론의 중요한 요소나 담론 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된 의미론적 거대 구조라는 이론적인 용어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거대 구조는 한 담론에 내재된 문장이나 명제의 연속으로 구성된 의미론적 표상이다. 즉 거대 구조는 전체 담론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의미 구조를 말하는 것이다. 의미론적 거대 구조는 의미의 전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텍스트의 주제나 요점을 나타낸다. 거대 구조는 담론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 구조며 담론 의미의 통합적인 부분이다.

기자와 편집자가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미디어 이용자가 뉴스를 이해하고 저장하고 기억하고 후에 이를 재생산하는 데에도 거대 구조들과 인지 작용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어떻게 뉴스 제작자가 무수히 많은 뉴스 아이템들을 지속적이고 일상적으로 요약하는지를 설명해준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대부분의 독자들이 왜 주요한 표제만을 다시 말해, 뉴스 보도의 한층 높은 수준인 거대 구조만을 기억하는지를 설명해준다. 이렇게 텍스트로부터 의미론적 거대 구조를 추출할 수 있는 언어 사용자들의 능력은 수많은 언어학적·인지적 규칙과 전략에 기초한다. 이러한 거대 구조를 의미론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논제나 주제 혹은 요점에 대해 말할 때 문장론적 구조나 문체, 수사학적 장치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의미나 지시 대상에 대해 언급하기 때문이다.

한 신문의 기사는 몇 개의 중심 논제가 있다. 이때 전체의 논제들이 고도의 요약을 통해 표제가 된 것인데 이것은 어딘가 주관적이고 왜곡된 형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형태의 요약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요약은 단순히 텍스트를 축약시킨 형태만이 아니다. 이러한 요약의 이전에 이미(기자나 독자가 모두) 알고 있는 상황들을 내포

한다. 또 이러한 요약은 텍스트의 결론들을 대신해서 제시될 수도 있다. 거대 구조를 만드는 방법은 삭제·생략·일반화·구성 등인데, 이러한 규칙을 거대화 규칙이라 한다. 이러한 규칙을 통해서 복잡하고 자세한 텍스트의 의미 구조는 더 단순하고 더 일반적인 축약된 의미 구조로 만들어진다.

한편, 텍스트의 전반적인 의미와 거대 구조를 총체적으로 구성하는 형식을 인지적 상층 구조라 일컫기도 하고, '스키마'라고 일컫기도 한다. 이는 뉴스 담론이 가진 일련의 특성을 범주화하고, 이러한 범주를 배열하는 일련의 규칙 또는 전략으로 정의된다.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수많은 담론들은 제작 및 이해 과정을 용이하게 하는 특유한 상층 구조를 드러내게 된다. 만일 우리가 앞으로 나올 텍스트가 소설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우리 문화 속에 존재하는 소설의 인지 구조를 생각해낼 수 있다. 그러므로 주제의 전체적인 구조와 인지 형태의 전반적인 구조는 텍스트를 분석하고, 제작하고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뉴스 기사는 헤드라인과 리드, 주요 사건, 사회적 배경, 사건의 역사, 사건에 대한 반응, 논평 등과 같은 전통적인 범주의 수직적인 스키마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뉴스 보도의 주요한 커뮤니케이션 기능과 뉴스 보도의 생산과 수용 조건들은 모든 수준에서 뉴스의 구조를 결정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면서도 일반적인 원칙은 중요한 정보가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뉴스 보도의 전체적인 주제 또는 스키마 구조뿐만 아니라 한 문단에서 문장의 배열, 한 문장 내에서 요소들의 배열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뉴스 보도 전체에서, 그리고 모든 수준에서, 뉴스 보도의 특정한 연관짓기를 연구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도 뉴스 보도의 인지적·사회적·이데올로기적 생산 조건을 연구할 수 있게 된다.

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I.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목적은 '한보 사태'에 대한 뉴스 담론을 사회·문화적 컨텍스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구성된 뉴스 담론의 변화 과정과 그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즉, 사회적 의미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그런데 본 논의에서는 언론 전반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신문 보도를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신문이 구성해낸 '한보 사태' 담론의 의미 구조와 그에 따른 변화의 추이를 반 다이크의 '사회적 인지'의 개념 속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 문제들을 설정하였다.

연구 문제 1. 한보 부도 사태에 대한 신문 보도의 뉴스 담론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가?

연구 문제 2. 한보 부도 사태에 대한 뉴스 담론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 컨텍스트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 문제 3. 한보 부도 사태 뉴스 담론이 구성하고자 한 사회적 인지는 어떠한 것이며, 이것이 지니고 있는 함축적 의미는 무엇인가?

II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연구 대상은 일간지 중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으로 설정했다. 두 신문을 채택한 이유는 두 신문의 정치적 성향이 대조적이므로 사건에 대한 의

미 구성에서 서로 차이가 날 것이고 따라서 연구 문제의 규명이 비교적 선명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유용성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뉴스 아이탬은 '97년 1월 20일부터 '99년 5월 31일에 걸쳐, 조선일보의 경우는 630아이탬이며, 한겨레신문은 298아이탬이었으며, 이는 주로 '스트레이트 뉴스'의 형태였다.

그리고 분석 대상 기사가 긴 시간에 걸쳐 양이 많은 관계로 분석의 간결함과 명료함을 위해서 시기를 분할하여 분석해야 했다. 한보 사태의 뉴스 담론은 크게 6국면에 걸쳐 변화하고 있었다. 국면 분할은 일단 전체 기사를 살펴본 후, '한보 사태'에 대한 성격 규정이 크게 변하는 시기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표-1〉 '한보 사태'의 국면: 주요 사건의 전개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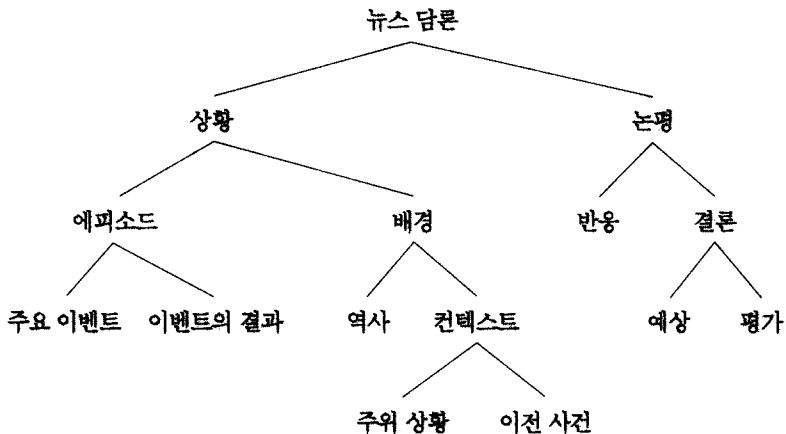
	시기	주요 사건
1국면	1. 23~2. 5	· 한보철강 부도, 정태수 검찰 소환—정·관계 로비 리스트 진술
2국면	2. 6~2. 20	· 검찰—정치인 소환 조사, 한보 수사 결과 발표
3국면	2. 21~3. 22	· 야권의 김현철 의혹에 대한 수사 촉구 및 검찰의 수사진 교체
4국면	3. 23~4. 6	· 검찰의 김현철 의혹 수사와 정치인 재수사(한보 재수사)
5국면	4. 7~5. 1	· 한보 청문회, 김현철 의혹 수사와 정태수 리스트 33인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
6국면	5. 2~5. 31	· 김현철 사법 처리,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 촉구, 정치권 제도 개선 논의

분석 방법으로 반 다이크의 담론 분석의 개념과 그에 따른 담론 분석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는 정태적·기호학적 방법이 다소 한계를 보이고 있는 뉴스 아이탬의 역동성을 연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보 사태' 담론은 '한보 사태'와 관련된 참여자들의 이해 관계와 정치·경

제·사회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뉴스 담론 분석을 통해 ‘한보 사태’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제반의 컨텍스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보 사태’ 담론이 변하는 이유와 궁극적으로 담론을 통해 획득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위자들의 이해 득실을 알 수가 있는데, 반 다이크의 뉴스 스키마 모델이 담론 구성에 있어서 컨텍스트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실제로 반 다이크의 뉴스 스키마 분석은 하나의 기사 내에서 작동하는 여러 하위 구조들의 분석을 통하여 의미 구조를 밝혀내는 것인데, 본 연구에서는 한 기사가 아닌 일정 시기의 전체 기사를 대상으로 적용하고자 하므로 약간의 응용이 요구되었다. 반 다이크의 뉴스 스키마 분석이 각각의 기사를 대상으로 그 의미 구성의 과정을 추출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대상 기사가 많은 관계로 사건 흐름 중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기준으로 기사를 분류한 후, 각 시기의 전체 기사를 대상으로 뉴스 스키마 구조를 추출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다. 반 다이크의 뉴스 스키마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표-2〉 반 다이크의 뉴스 스키마 구조



4. 결과 및 논의

I. 조선일보의 '한보 사태'에 대한 뉴스 담론 구성

1) 1국면의 담론 구성

1국면은 '96년 12월에 촉발된 여당의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반대하여 야당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일어난 바로 직후의 시기다. 노동계는 노동법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지속시켰고 정부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노동계 파업을 해결하려 했으나 각계각층의 반발이 동시에 제기되어 여당은 상당히 심각한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이었다. 경제적으로는 2개월 남짓의 시기 동안 진행되었던 노동계의 파업이 수출 격감을 초래하고 있었고, 엔화 약세 현상으로 인하여 국내 경기는 침체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한 경기 불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 시기에 조선일보는 한보철강 부도에 대한 담론을 “정경 유착에 의한 부정부패, 경제 위기의 심화” 사안으로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노동계 파업이라는 사회적 갈등, 그로 인하여 '97년말에 있을 15대 대선을 앞두고 여권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 정국 주도권을 놓치고 있는 상황, 노동계 파업과 엔화 약세 현상으로 인한 경기 불황 상황에서 발생한 한 기업의 거액의 금융여신 부도가 경제 위기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정경 유착 사례들이 처리되었던 방식들에 대한 경험들, 이러한 텍스트를 둘러싼 시대적·사회적·역사적 컨텍스트들과 한보 사건의 상호 작용은 한보 사건을 “정경 유착에 의한 부정부패,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는” 사안으로 바라보도록 만들고 있다.

〈표-3〉 조선일보 1국면의 '한보 사태'에 대한 담론 구성

1국면 조선일보의 담론은 “정경 유착·경제 위기”다. 〈표-3〉에서 제시되고 있는 주변 상황들은 노동계 파업, 경기 불황 현상이다. 그리고 사회인지적 컨텍스트로 이전의 정경 유착 사례에 대한 역사적 경험들이 제시되고 있다. 상황적 컨텍스트인 노동계 파업이 한보 사건 담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노동계 파업의 원인 제공자인 신한국당 내 실세인 ‘민주계 의원들’의 정치적 위상의 하락이다. 신한국당의 민주계는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이고 정권 재창출의 주체로 부상해 있었다. 노동계 파업과 잇따른 한보 부도로 인하여 대선 고지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던 민주계의 위상은 격하되고 있었다. 한보 사태에서도 역시 주로 민주계 의원들이 정태수로부터 로비 자금을 받아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인지적 컨텍스트인 정경 유착 사례에 대한 역사적 경험들도 한보 사태의 담론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 처리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한 사회적 인지,⁵⁾ 그리고 그 사건의 주체였던 ‘정태수’라는

5) “.....’95년 10월에 발생한 ’96년 내내 정치권을 뒤흔든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전개된 과정은 여러모로 지금의 한보 사태와 닮은꼴이었다. 대통령의 비장한 결의,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거물 정치인 구속설, 정계 개편설, 그리고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조까지 비슷했다. 천지를 뒤흔들던 전·노 비자금 사건은 결국 20억 원을 받았다고 실토한 DJ만 상처를 입고 YS를 비롯한 여권 핵심부는 말짱한 채로 넘어갔다. 재벌 총수들도 몇 달 뒤에 대부분 집행 유예 판결을 받았다.....” 「YS의 有始有終 한보 해법에 달렸다」, 『시사저널』.

인물에 대한 사회적 인지⁶⁾는 한보 사태를 빠르게 '정경 유착' 현상으로 규정하게 하였다. 결국, 한보 사태를 둘러싼 상황·인지적 컨텍스트는 한보 사태를 이전의 정경 유착 사례들과 유사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경제 불황을 지속시키는 악재로 바라보게 한다.

2) 2국면의 담론 구성

2국면의 주요 사건은 정태수가 정·관계에 로비한 사실을 검찰 수사에서 시인했다는 것이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정치인 수사에 들어가 정치 자금을 받은 정치인과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하는 한편, 정태수의 비자금 조성 내역 및 사용처 규명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 중수부는 한보 사건이 발생한 지 1개월여 만에 한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따라서 이 시기는 검찰에 소환되는 정·관·금융계 인사들의 모습이 지면을 차지하게 되고, 정태수가 검찰에서 진술한 '정태수 리스트'에 대한 온갖 추측과 소문들이 보도되었다. 그러나 '깃털론'이니 '몸통론'이니 하면서 정치권을 뒤엎어놓을 것 같았던 온갖 추측과 소문들을 뒤로한 채, 결과는 여당의 홍인길·정재철 의원, 야당의 권영길 의원의 구속과 채권 은행단의 몇몇 전·현직 은행장들의 소환 조사 및 구속뿐이었다.

한편, 김현철과 한보철강의 연관설을 제기하는 야당의 주장, 필요하다면 김현철도 조사하라는 김영삼 대통령(이하 YS)의 지시 등 권력 측근과 한보의 관계에 관한 기사들이 보도되고 있지만, 이런 기사들은 정태수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이 누구고, 누가 얼마를 받고, 누가 대출 압력을 넣었다는 등등의 정치인 일반과 관련된 기사들에 파묻혀 중요하게 다뤄지지는 않았다.

1997년 2월 5일자.

- 6) "그는 사실 로비의 귀재다. [……] 정씨는 지금까지 두 차례 법적인 제재를 받았다. '91년 수서 사건과 95년 노태우씨 비자금 사건이다. [……] 정씨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조성한 비자금을 변칙 실행 전환한 혐의로 구속됐다가……"「한보그룹 정태수 회장, 수수께끼 성장 미스터리 몰락」, 『주간한국』, '97년 1월 29일자.

결국, 조선일보는 2국면에서 한보철강 부도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 유착, 특혜 대출 비리”라는 담론으로 구성했다. 즉 정치권 핵심 세력들이 금융권에 압력을 넣어 한보철강에 대한 거액의 여신이 가능했으며, 따라서 문제는 정태수의 정치권 로비 대상자를 찾아내는 것으로 압축되었다.

〈표-4〉 조선일보 2국면의 ‘한보 사태’에 대한 담론 구성

2기에서 조선일보는 정태수가 검찰에서 정·관계 로비 사실을 시인했다는 주요 이벤트를 중심으로 검찰의 한보 사태 관련 정치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중심으로 기사를 보도하였다. 그러나 검찰이 한보 사태에 대한 수사 결과가 정태수와 정치인 몇 명 그리고 은행장 몇 명의 구속에 그치고, 거액 대출의 배후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자, 이에 대해 각계각층의 비판이 제기되고 또 한편으로 야당에서는 지속적으로 김현철 개입설을 제기하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일보는 2국면 한보 사태에 대한 담론을 “특혜 대출·정경 유착”으로 구성하고 이후 한보에 대한 거액 대출의 배후에 대한 논의에 동참하게 되는 태도 변화를 보이게 된다.

……권언 유착에 의한 고급 정보의 독식 구조는 [……] 엄청난 악패를 끼친다. [……] 정부가 정권 안보를 위한 여론 조작의 의도로 하위 정보를

홀리고 조선일보는 그것을 대서 특필한다. 다른 신문들은 물먹지 않으려고 진위를 따질 겨를도 없이 추종한다. 그리고 국민은 분위기에 휩쓸려 그것을 진실로 믿어버린다.⁸⁾

즉, 조선일보는 한보 사태와 그 배후의 핵심인 권력 실세의 문제를 핵심적으로 다루기보다는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정치인들에 대한 기사와 동요하는 정치권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다루는데, 그에 부합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이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반발이 강하게 제기되자 한보에 대한 김현철 개입설이라는 권력 실세에 대한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한보 사태의 배후인 권력 실세의 문제를 회피하고 부차적인 정치인들 몇 명에 집중하는 것은 조선일보가 한보 사태를 정경 유착으로 규정하되, 정치권의 주체를 김현철보다는 정치인 몇 명으로 규정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⁹⁾

3) 3국면의 담론 구성

3국면에서 조선일보의 주요 이벤트는 '김현철 비리 의혹'과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착수 사실이다. 이 시기에 김현철 의혹과 관련된 보도들로, 야당의 김기섭씨에 대한 수사 촉구, 군부에 형성된 현철씨 인맥, 김현철의 재벌들과의 잦은 회동, 김현철씨의 자금 관리책으로 지목되고 있는 박태중씨의 리베이트에 관련된 기사들이 있는데, 다른 내용의 기사들보다 이

8) 김동민(1999), 「역사가 말하는 조선일보의 진실」, 『조선일보를 아십니까?』, 김민웅 외 9인, 개마고원, pp. 86-88.

9) “.....한보 사태와 관련해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다소 엉뚱하다. 그것은 누가 조선일보에 검찰 수사 정보를 제공했는가 하는 점이다. [.....] 조선일보는 2월 5일자,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 뿌려지는 44판에서 한보 정태수 총회장이 검찰에서 신한국당 홍인길 의원과 국민회의 권노갑 의원에게 각각 7억 원과 5억 원을 준 것으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그때까지 한보 사태를 다룬 어떤 언론 보도보다 놀랄 만큼 정확하고 구체적인 것이다. 이 보도가 나간 뒤 두 의원은 바로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받은 뒤 구속되었다.....” 「누가 민주계를 저격하는가」, 『시사저널』, '97년 2월 19일자.

런 기사들이 집중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담화에서, 한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수사 지시와 더불어 김현철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발표됨에 따라, 이전에 야당에서 제기했던 김현철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현실화되었다. 그리고 주변 상황으로 여당의 날치기로 통과되었던 노동법 사안 역시 여야 단일안이 마련되어 통과됨에 따라 노동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 구도는 해결되었고, 노동계 역시 계속해서 파업을 해야 할 명분을 잃게 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여야 정치권의 대립이 한보 사건 문제를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을 토대로 할 때, 조선일보는 3국면에서 한보 사건을 최고 권력 측근과 그 주변 집단들, 즉 정·관·재계의 파워 엘리트 집단의 조직적인 부정부패 사안으로 담론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5〉 조선일보 3국면의 '한보 사태'에 대한 담론 구성

한보 사태 2기에서 있었던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한보 사태의 원인, 즉 거액 대출이 가능했던 이유들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내용이었다. 한보 사태의 본질을 은폐시키려는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는 즉각 각계각층의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그리고 국민회의에서 주도하는 김현철 개입설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검찰은 김현철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게 된

다. 조선일보는 검찰이 김현철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이벤트를 중심으로 야권에서 제기하는 김현철 비리 내용들, '92년 당시 YS와 정태수의 관계를 컨텍스트로 제시한다.

김현철 비리 의혹에 대한 기사들은 주로 인사, 이권 개입 의혹과 재벌들과의 교류 사실에 관한 내용들이다. 그리고 김기섭, 박태중 등 김현철 측근과 관련된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다. 또한 '92년 대선 당시 YS와 정태수와의 대선 자금을 매개로 한 관계를 역사적 컨텍스트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한보 사태의 소위 '몸통'으로 김현철을 제시하되 '92년 대선 자금과 연결지어 제시함으로써 김현철 문제를 대통령의 신뢰를 받는 측근의 부정 부패로 바라보게 만들고 '소통령' 김현철의 문제를 부차화시키는 효과를 획득하게 된다.

4) 4국면의 담론 구성

4국면에서 조선일보는 한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 즉 김현철 문제와 정치인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 내용을 주되게 보도하고 있다. 동시에 주위 상황으로 야권의 정태수씨와 YS의 600억 대선 자금 관련설, 여야의 경제대책협의체 협의 내용, 그리고 김현철이 황장엽 망명을 중개했다는 내용을 보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사들은 박태중씨의 대선 직후 자금 인출 내역, 검찰의 '92년 '나사본'의 대선 자금 조사, 박태중씨 비밀 계좌 집중 추적 100억 원대 자금 운용 출처에 대한 조사, 검찰 총장의 대선 자금에 관한 수사 계획이 없다는 내용, 김현철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 내용들과 함께 4국면의 담론을 구성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대선 자금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한보 사건의 본질을 대선 자금 문제로 이끌어가고 있는 듯 보이지만, 김현철 의혹과 김현철 측근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주되게 다룸으로써 담론은 권력의 핵심 측근인 김현철의 비리를 한보 문제의 본질로 구성해나가고 있다. 이런 시각을 뒷받침해주는 기사들은 야권의 김현철 2천 억 리베이트설 진상 규명 요구

와 김현철 사법 처리 요구에 대한 기사들이다.

또한 여야의 경제대책협의체 협의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 이는 한보 문제가 지속되면서 유발된 경제적 악영향 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김현철 사법 처리를 기점으로 한보 문제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는 의미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표-6〉 조선일보 4국면의 '한보 사태'에 대한 담론 구성

이 시기 주요 이벤트를 둘러싼 상황 컨텍스트들로는 야당에서 대선 자금설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검찰이 대선 자금 수사 계획이 없다는 입장 발표가 있었고, 그리고 여야가 경제대책협의체를 구성¹⁰⁾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기사들을 들 수 있다. 여기서 주요 이벤트와 제시되고 있는 상황 컨텍스트들의 상관 관계를 연계시키면 다음과 같다. 검찰은 한보의 몸통으

10) “.....정치 손놓고 경제 살리기 골몰..... ‘경제를 배우자’ 국민회의에 갑자기 경제 공부 열풍이 불고 있다. 김대중 총재가 3월 28일 기자 회견에서 정치의 정자도 꺼내지 않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고 난 뒤.....” 『시사저널』, '97년 4월 2일자.

로 지목되고 있는 두 개의 핵심어인 '김현철'과 '대선 자금' 중 '김현철'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김현철 의혹이 대선 자금과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선 자금 문제는 거둬내고, 김현철 문제만을 다루겠다는 것이다.

한편, 여야의 '경제대책협의체' 구성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조선일보의 자매지 『주간조선』의 기사¹¹⁾는 이런 조선일보의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가 벼랑 끝을 향해 달리고 있다. 브레이크는? 없다…… 기업이 연이어 넘어져 실업자가 넘쳐나며, 불만 세력들이 뛰쳐나와 유혈 사태가 생기고 (……) 요즘도 삼미와 한보건설이 잇따라 부도를 내면서 나돌던 '철'이 실제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조선일보는 경제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의식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김현철 문제가 한보 사태와 관련하여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기에 경제 위기 상황을 그토록 심각하게 제시하고 있는 그 의도가 무엇이나 하는 것이다.

5) 5국면의 담론 구성

국정조사특위에서 진행한 한보 사건 관련 인사들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있었던 5국면에서, 조선일보는 '김현철의 이권 개입'을 주요 이벤트로 잡고 있다. 청문회에서 김현철과 다른 증인들은 그 동안 제기되었던 의혹들을 대부분 부인했는데, 이는 검찰에서 진행하고 있던 김현철 이권 개입 관련 사실들에 대한 보도와 함께, 김현철의 이권 개입 의혹을 사실로 확정짓기 위한 의도라 볼 수 있다. 또한 3국면과 4국면에서 담론화한 권력 집단의 부정부패의 실체를 김현철의 이권 개입과 정치인들의 뇌물 수수로 제

11) 「부도-외채-대권 싸움-김현철…… 4월을 가야 한다」, 『주간조선』, '97년 3월 27일자.

시함으로써, 김현철 비리 의혹으로 제기되었던 국정 개입-이권 개입 의혹들을 이권 개입으로 특화시키는 효과를 함께 거두고 있다.

5국면 뉴스 스키마에서 제시되고 있는 컨텍스트들은 정치권의 고비용 정치 개선 여야 협의체 제안, 여당의 한보 수사 마무리 방안에 대한 논의, 이회창씨가 대통령에게 요청한 정치인 수사 조기 매듭에 관한 기사들, 그리고 검찰의 김현철 이권 개입에 관한 구체적인 수사 내용들인데, 이러한 컨텍스트적 특성을 지닌 기사들은 주요 이벤트로 김현철의 이권 개입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사법 처리로 한보 수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담론을 구성하고 있다.

정치권의 고비용 정치 개선에 관한 논의는 권력 측근과 파워 엘리트 집단의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차원에 관한 것으로서 한보 사건의 배후를 김현철이라는 특정인으로 지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 일반으로 규정하는 역할을 분명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7〉 조선일보 5국면의 '한보 사태'에 대한 담론 구성

조선일보는 5국면에서 주요 이벤트로 '김현철 이권 개입: 2천 억 리베이트'설을 잡고 있다. 이런 이벤트를 둘러싼 컨텍스트들로는 검찰의 김현철 이권 개입에 대한 수사, 이회창씨 정치인 수사 조기 매듭 요청, 여당의

고비용 정치 개선 논의, 여당의 한보 마무리 방안 논의가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는 '한보 청문회'가 열린 시기로 이를 상황 컨텍스트로 설정할 수 있겠다.

한보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을 전후해 터져나온 신문들의 정태수 리스트 보도 경쟁은 청문회와 맞물려 여론의 관심을 일거에 한보 사건의 본류가 아닌 정치 자금 수수 쪽으로 몰아가게 한 효과를 낸 것이 사실이다…… 언론에 한보 자금을 받은 정치인들의 명단이 언론에 대서 특필되면서 김현철이라는 이름 석자가 슬그머니 사라진 점…… 또 '92년 대선 자금 문제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한풀 꺾인 듯한 분위기……¹²⁾

앞에서 제시한 기사 내용의 요점은 언론에서 대서 특필한 정태수 리스트에 대한 기사들은 한보 사건의 핵심을 비켜난 것으로서, 이는 권언 유착에 의한 사건의 본질 흐리기 수법이라는 것이다. 한보 사건의 본질은 최종적으로 '김현철 문제'로 압축되었고, 더 나아가 '92년 대선 자금' 문제로 이동할 단계까지 온 상황에서, 정태수 리스트를 근거로 한 정치인에 대한 수사 기사는 크게 두 가지 효과를 드러낸다. 우선 한보 사건을 단순한 정치 자금 수수 문제로 축소시키는 효과, 다음으로 김현철 문제, 대선 자금 문제에 대한 회피 효과다.

6) 6국면의 담론 구성

6국면에서 조선일보는 YS의 대선 자금에 관한 대국민 담화 발표와 대선 자금 900억 설을 주요 이벤트로 제시하고 있다. 야당에서는 김현철 문제가 일단락 매듭지어지면서 공격의 대상을 대선 자금 문제로 잡고 대선 자금 800억 설을 제기하고 있었으며, 이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 조선일보는

12) 「음모론 난무……정치 파산」, 『주간한국』, '97년 4월 16일자.

독자적으로 대선 자금 900억 설을 제기하였다.

한편, 정·재계의 고비용 정치 구조 개선 주장과 선거 제도 개선 요구, 정치권의 15대 대선 후보 캠프 가동, 대량 부도 사태의 장기화와 맞물려 한보 사건은 김현철 구속을 기점으로 빠르게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한보 사건을 대하는 야당의 의도, 즉 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 검·경의 중립, 방송의 중립, 대통령의 대선 공정 관리를 유도하려 한다는 평가와 함께 고비용 정치 구조 개선 논의를 부각시켜, 한보 사태 자체에 대해서는 고비용 정치 구조 개선을 통한 정경 유착이 불가피했던 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기로 의미 구성하고, 이런 입장은 15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이해 타산으로 더욱 분명해진다.

결국, 조선일보는 6국면에서 정경 유착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정치권의 고비용 정치 제도 개선의 필요성으로 한보 사건에 대한 담론을 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8〉 조선일보 6국면의 '한보 사태'에 대한 담론 구성

II 한겨레신문의 '한보 사태'에 대한 뉴스 담론 분석

1) 1국면의 담론 구성

1국면에서 한겨레신문은 한보철강 부도 사건을 “권력형 금융 비리” 사

안으로 담론 구성하고 있다. 이 시기에 보도된 기사들을 분석하여 뉴스 스키마를 추출해본 결과, 한겨레신문은 검찰의 금융권 자금 대출 경위 조사 및 고위층 로비 여부에 대한 조사 내용을 주되게 다루고 있으며, 한보 사건을 둘러싼 주변 상황들로는 노동계의 파업-한보 부도로 궁지에 몰린 여당이 정국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대선 구도를 조기에 가시화시키려 한다는 것과 정치권으로의 검찰 수사 확대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의 '은행 개혁 시급'이라는 주제의 사실 기사를 인용 보도하며 거액의 금융권 대출이 가능한 한국 금융 구조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가 한보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 유착 현상으로 바라보며 그 유형을 구체화하고 있지 않는 반면에, 한겨레신문은 거액의 은행 여신이 가능한 금융 구조와 정치 권력의 비합리적인 관계에 주목하고 있으며 관치 금융 구조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한겨레신문은 거액 여신을 가능케 한 배후로 권력 핵심을 지목하고 있다. 결국, 한겨레신문은 한보 사건 1국면에서 '거액의 대출을 가능케 한 권력 배후는 누구인가?'라는 화제를 중심으로 한보철강 부도 사건을 "권력형 금융 비리" 담론으로 구성해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9〉 한겨레신문 1국면의 '한보 사태'에 대한 담론 구성

1기에 한겨레신문에서 한보 사태를 둘러싼 상황 컨텍스트 요소로 주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노동계 파업과 여당인 신한국당의 대선 구도 조기가시화 계획이다. 이 두 가지 상황을 연결하는 고리는 '한보철강의 부도'의 원인을 둘러싼 해석들이다. 즉, 거액의 여신은 상식적으로 권력 핵심과 연계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서 15대 대선에서 한보-권력 집단 사이의 관계가 쟁점으로 부각하게 되면 집권당에 불리하기 때문에 대선 시기가 본격화되기 이전에 이 문제를 터트려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이다.¹³⁾ 15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계 파업의 후유증으로 대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놓칠 상황에 처한 신한국당과 집권 세력은 한보를 부도 처리하여 위기 국면 전환을 도모하는 동시에 15대 대선에서 한보가 미칠 악영향을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를 염두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컨텍스트의 제시와 더불어 한겨레신문이 1기에서 한보 사태를 다루는 방식 중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지점은 '관치 금융 구조'¹⁴⁾라는 제도적 컨텍스트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용어는 70년대 박정희 정권이 수출 입국과 경제 건설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특정 기업에 의도적으로 독과점을 허용하고 각종 금융 및 조세 특혜를 부여하면서 생겨났다. 대기업을 강제로 탄생시키기 위해 자금의 수요 공급에 따른 시장 경제 원리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자금 지원을 해준 것이다.¹⁵⁾ 관치 금융 구조는 집권 정당의 권력 남용 현상으로서 이를 담론의 컨텍스트로 제시하고 있다

13) "좀더 살려두지 않고 왜 지금 부도 처리 해버렸느냐는 의문과 관련해서는, '한보가 여차피 자생 능력을 상실했다면 정치 일정상 지금 손을 터는 것이 현 정권과 한보간 정경 유착 시비의 연발 대선 쟁점화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거나 '지금도 노동법 날치기 처리의 후유증을 가장 효과적으로 잠재울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본 데 따른 국면 전환용'이라는 설왕설래가 있다……" 「말도 안 되는 대출, 배후는 있다」, 『한겨레 21』, 제144호, '97년 2월 6일자.

14) "시중은행 한 임원은 '그만큼 큰 거액을 은행장 혼자서 어떻게 결정해 지원할 수 있겠느냐며 대출 결정 과정에서 정부나 정치권의 외풍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결국 한보 사태의 배후에는 '관치 금융'의 악령이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관치 금융' 있는 한 금융 개혁 하나하나」, 『주간한국』, '97년 1월 29일자.

15) 『주간한국』, 앞의 자료, '97년 1월 29일자.

는 것은 한겨레신문이 한보 사태와 권력충과의 유착 관계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2) 2국면의 담론 구성

2국면에서 한겨레신문은 검찰의 정치인 수사에 치중하여 기사를 보도하기보다는 이전의 정경 유착 사례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경험에서 보았듯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의 수사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라는 화제에 입각하여 기사를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 수사의 정치권, 특히 청와대로부터의 비독립성, 정치권의 이해 관계에 따른 선별적 수사 행태, 한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의 불가능성에 대해 집중 보도하고 있다. 또한 검찰의 한보 수사 결과에 대한 발표 내용을 “대부분 무혐의 판결”이라고 요약하면서, 검찰 수사의 정치권으로부터의 비독립성을 비판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한겨레신문은 시민 단체의 정치 자금법 개정, 부패 방지법 제정, 금융 실명제 보완, 관치 금융 청산 촉구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정경 유착 사건들을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정경 유착을 구조적인 특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한겨레신문은 한보철강 부도 사건에 대한 담론을 “구조적 정경 유착, 부정부패 사안”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겨레신문은 주되게 검찰 수사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 정경 유착을 가능케 하고 또한 처벌할 수 없는 현재 법조항의 허점들을 보도하며, 한보철강의 부도를 한국 사회의 구조적인 정경 유착 관계의 산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표-10〉 한겨레신문 2국면의 '한보 사태'에 대한 담론 구성

〈표-10〉에서 보듯이, 한겨레신문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애초부터 기대를 걸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초점을 검찰의 정치권에 대한 비독립성에 맞추고 있다. 이는 조선일보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둘러싼 현상들을 중심으로 담론을 구성하고 있는 태도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한겨레신문은 이 시기 한보 사태에 대한 담론을 “구조적 정경 유착”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이때 컨텍스트로 제시되고 있는 것들은 야당의 92년 대선 자금 조사 요구, 검찰의 대선 자금 불가 방침, 정경 유착을 가능케 한 법적·제도적 문제들이다. 또한 한보 사태의 배후를 권력 핵심의 정치 자금 조달을 위한 재계와의 유착 관계로 보고, 정태수가 92년 YS 진영에 대선 자금을 제공한 대가로 당시 집권 세력이 된 YS 정권이 한보철강에 거액의 대출을 제공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상황 컨텍스트로 제시되고 있는 DJ의 대선 자금 조사 요구는 한보 사태의 실제 배후를 권력 핵심 집단으로 지목하는 효과를 지니게 되며, 따라서 한겨레신문은 한보 사태에 대한 담론을 권력 핵심이 배후인 구조적 정경 유착으로 구성하게 된다.

결국, 한겨레신문은 한보 사태를 92년 대선 자금을 둘러싸고 벌어진 구조적 정경 유착 현상의 결과로 해석하여, 한보 사태의 배후를 당시 정권의

권력 핵심 집단으로 보고 있다. 이때 권력 핵심 집단은 대통령의 측근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측근의 실체를 명시적으로 지목하고 있지 않지만 김현철의 한보 개입설을 보도함으로써 그 대상을 김현철로 좁혀가고 있는 것이다.

3) 3국면의 다른 구성

3국면 한겨레신문의 주요 이벤트는 김현철의 국정 개입 및 이권 개입과 이에 대한 검찰 수사 착수 사실이다. 김현철씨가 정치 사정과 인사, 기업 체 이권에 상당히 관여했고, 역사적으로는 92년 대선 자금과 깊은 연관이 있으며, 한보와도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야당의 김현철 리베이트 조성설을 보도하면서 김현철의 비리 사례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국민회의는 92년 14대 대선 당시, 여당이 대선 자금을 한보를 통해서 돈세탁했다고 주장하며, 한보와 대선 자금과의 연관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김현철이 한보철강의 설비 도입 과정에서 중개사를 통해 2천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조성하여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국면에서 주되게 다루었던 검찰 수사의 비독립성으로 인한 제한적 수사의 허점을 보강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으로서 정치권의 한보 문제 국정 조사 특위 활동을 보도하면서, 김현철의 청문회 증인 채택, 김현철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조사 활동을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시민 단체의 특검제 입법 청원 시위 계획을 보도하여, 검찰 수사의 제한점을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의 철저 수사 지시를 보도하여 김현철 문제에 대한 철저한 수사의 당위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편, 한총련이나 김종필 자민련 총재(이하 JP)의 한보 사건과 김현철 비리 의혹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도하면서, 한보 사건을 대선 자금과 김현철 비리와 연관된 것으로, 권력 집단의 집단 범죄, 정권 차원의 총체적 비리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한겨레신문에서는 ‘한보 사건’이 특정 개인의 문제, 즉 김현철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김현철의 비리 의혹들, 국정 개입, 인사 개입, 정치 사정, 기업체 이권 개입 등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면서, 한보 사건—대선 자금—김현철 비리 의혹들을 연결하고 있다. 따라서 3국면에서 한겨레신문은 한보 사건을 “권력 최측근의 비정상적 권력 남용·비공식적 국정 개입 사안”이라는 담론을 구성하고 있다.

〈표-11〉 한겨레신문 3국면의 ‘한보 사태’에 대한 담론 구성

4) 4국면의 담론 구성

4국면에서 한겨레신문은 주요 이벤트로 ‘김현철 이권 개입: 2천 억 리베이트설’로 잡고 있다. 그 결과 검찰의 박태중씨 계좌 추적과 한보와 김현철의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면적인 재조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검찰의 재수사 착수와 더불어 검찰 내부에서 중립 강화 주장이 제기되고 청와대와 상의하여 수사 결과를 처리하는 관행을 뿌리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검찰은 한보 설비 도입 중개인을 소환하여 2천 억 리베이트설을 추궁하고 박태중씨를 상대로 리베이트 관련 여부와 제2금융권의 박태중씨 계좌를 압수 수색한다. 그리고 김현철이 개입한 한보의 북한에 대한 불법 투자 사실을 보도한다. 이런 기사들은 이권 개입을 중심으로 한 김현철의

비리 의혹 사실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인데, 한겨레신문은 바로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보 사건을 김현철의 비리 중 이권 개입 부분으로 환원하여 김현철 비리 문제로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다.

주요 이벤트와 이벤트를 둘러싼 배경, 컨텍스트들을 고려해볼 때 한겨레신문 4국면에서 구성한 한보 사건에 대한 담론은 “권력 최측근의 부정 부패”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

〈표-12〉 한겨레신문 4국면의 ‘한보 사태’에 대한 담론 구성

한겨레신문은 4국면의 주요 이벤트를 ‘김현철 이권 개입: 2천 억 리베이트설’로 잡았다. 그리고 주요 이벤트를 둘러싼 상황 컨텍스트들로 검찰이 김현철씨의 측근 인사인 박태중씨 계좌 추적에 들어갔다는 사실과 한보가 김현철의 중개로 북에 불법 투자를 했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한겨레신문은 김현철 문제에 대해 상당히 체계적·구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3국면에서 김현철 문제를 총체적으로 제시했다면 4국면에서는 이권 개입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현철의 측근인 박태중의 계좌 추적을 진행시켰다. 박태중은 14대 대선 당시 YS 선거 본부의 사조직인 ‘나라사랑실천본부’의 사무국장을 지낸 사람으로서 나사본 선거 자금 출납을 맡았고 이후에는 김

현철의 인맥과 활동 자금 조달 문제를 관리해온 인물이다. 따라서 박태중은 김현철 문제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인물로 부상되었다.

이렇듯이, 한겨레신문은 4국면에서 이권 개입을 위해서라면 비정상적인 권력 행사를 마다하지 않았던 김현철의 행태를 보도하며 한보 사태의 몸통을 김현철이라고 명시화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은 주요 이벤트와 이를 둘러싼 컨텍스트들의 상호 작용을 통해 이런 담론을 더욱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5국면의 담론 구성

5국면에서 한겨레신문은 3국면부터 계속 이어지는 김현철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데, 3국면에서 김현철의 비리 의혹을 국정 개입-이권 개입으로 제시했고, 이에 대하여 4국면에서는 김현철의 이권 개입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5국면에서는 국정 개입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주요 이벤트를 김현철의 국정 개입으로 제시하고, 김현철의 한보 대북 사업 배후설, 안기부 정보 유출, 언론사 인사 개입, 총선시 공천 관여 사실들을 개별적으로 자세히 다루고 있다. 여당에서는 정치인 수사 조기 매듭을 주장하고, 고비용 정치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겨레신문은 이런 사실에 대한 보도보다는 김현철의 국정 개입 의혹들에 대한 보도를 부각시키고 있는데, 이는 한보 사건을 정치인 일반의 부정부패의 사안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특정인의 권력을 이용한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 더 나아가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정권의 부도덕성 문제로 바라본다는 해석을 가능케 한다.

〈표-13〉 한겨레신문 5국면의 ‘한보 사태’에 대한 담론 구성

5국면에서 한겨레신문은 ‘김현철 문제’ 중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한겨레신문은 김현철 국정 개입 사례들로, 한보의 대북 사업 배후, 안기부 정보 유출, 언론사 인사 개입, 총선에서 공천 관련 사실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김현철 문제를 세부적으로 다루는 이유는 김현철 문제가 이전과 같은 단순한 친인척 비리가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다.

하지만 김현철 문제는 과거의 자질구레한 친인척 비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현철씨는 군·검찰·안기부 그리고 금융계에 자기 사람을 심고, 소소하게는 고속도로 휴게소 입찰에서부터 크게는 대북 정책 결정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국정 전반에 걸쳐 개입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¹⁶⁾

16) 『시사저널』, 앞의 자료.

6) 6국면의 '한보 사태'에 대한 담론 구성

6국면에서 한겨레신문은 주요 이벤트로 김현철이 이권 개입-국정 개입으로 구속되었다는 사실과 YS의 대선 자금에 관한 대국민 담화 발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한겨레신문은 김현철의 사법 처리 문제를 한보 사태의 몸통이라 할 수 있는 대선 자금 문제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도함에 따라, 김현철 국면을 해결하고 나서 한보 사태가 대선 자금 규명 문제로 이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선거법 개정을 서둘러 한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으려는 여당의 입장과 대선 자금 문제에 대한 YS 청문회 추진이라는 야당의 입장을 대별시켜 보도하고 있어, 정치 구조 개선 논의로 한보 문제를 축소시켜려는 입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6국면에서 한겨레신문은 한보 사건을 비정상적인 권력 구조의 산물로 규정하고 정치권 일반의 고비용 구조의 문제가 아닌 특징인이 비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권력 구조의 재배치 필요성을 제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YS의 대선 자금 담화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대선 자금 문제 규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은 김현철 문제를 둘러싼 현 정권의 권력 구조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6국면에서 한겨레신문은 김현철의 구속으로 한보 사태가 마무리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 몸통인 대선 자금 문제로 국면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한겨레신문은 6국면 한보 사태에 대한 담론을 김영삼 정권의 권력 구조의 재배치 및 구조 개혁으로 구성하고 있다. 당시 시기적으로 15대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담론은 정권 교체의 필요성과 맞게 된다.

〈표-14〉 한겨레신문 6국면의 ‘한보 사태’에 대한 담론 구성

Ⅲ. 양 신문의 ‘한보 사태’ 담론 구성의 추이 변화와 차별성

〈표-15〉 양 신문의 뉴스 담론의 추이 변화

〈표-15〉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뉴스 담론은 특정한 컨텍스트와 상호 작용하며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 단계를 거쳐 변화하고 있는 양 신문의 최종 담론은 조선일보는 '고비용 정치 구조 개선,' 한겨레신문은 '권력 구조의 개편'이다.

물론 이런 결과가 기존의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서 보도하는 정치 사안의 뉴스 담론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에 비춰볼 때 그리 새로울 것은 없다. 즉, 조선일보는 친여적 성격을 지닌 신문으로서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담지하고 있고, 한겨레신문은 집권 세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신문이기 때문에 '한보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격의 담론을 구성하고 있다고 간단하게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배경에서도 살펴 보았듯이 담론 분석의 의미는 어떤 현상에 대한 특정한 담론이 그 현상을 둘러싼 구체적인 상황, 컨텍스트와의 연계를 통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획득하고 그들을 설득·통합시켜내는 과정을 설명한다는 데 있다. 한보 사태의 경우도,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여러 단계의 담론을 형성시켜 각자의 시각에서 한보 사태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컨텍스트와의 연계를 통해 구성된 특정한 현상에 대한 담론이 그 현상에 대한 사회 구성원들의 동의를 확보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때, 이는 헤게모니적 권력 작동 개념과 일치하는 것이다. 즉, 담론을 통해 사회 권력 관계의 헤게모니 싸움이 일어나고, 담론의 우위 확보가 곧 헤게모니의 확보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사회 권력이 담론을 통제하거나 변화시킬 필요가 발생하고 이때, 권력의 담론 통제는 주로 컨텍스트의 통제를 통해 이뤄진다.

조선일보의 경우, 한보 사태의 근본 원인이면서 지배적 권력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약점인 소위 몸통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도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김현철이나 대선 자금 같은 핵심 사안이 부각될 때마다 조선일보는 정태수 리스트를 대대적으로 보도해 사건의 본질을 회

석시키는 담론을 구성해내고 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권언 유착에 의한 고급 정보의 독점 현상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한겨레신문이 구성하고 있듯이 권력 최측근의 비정상적인 권력 행사 및 국정 개입이라는 사건의 측면을 단순한 정치인들의 부정부패 측면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반면에, 한겨레신문은 '94년부터 보도해온 김현철 의혹에 대한 기사들을 토대로, 한보 사태를 구조적인 정경 유착, 권력 측근의 권력 남용 현상으로 담론화하고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권력 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조선일보와는 다르게 한겨레신문은 비교적 일관된 담론의 흐름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처음부터 권력 핵심의 문제인 김현철 문제로 접근했기 때문일 것이다.

5. 결론

— '한보 사태'의 뉴스 담론과 사회적 인지 관계에 대한 논의

한보 사태에 대한 조선일보의 담론은 여러 단계를 거쳐 다양한 담론들을 표출하고 있지만, 조선일보의 담론은 최종적으로 '정치권 일반의 부정부패'가 한보 사태의 원인이고, 대선 자금 문제이든 일반 정치인들의 정치자금 문제이든 당시의 정치 구조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담론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고비용 정치 구조의 개혁이 관건이라고 주장한다. '정치구조'의 개혁 주체는 '정치인'이다. 이런 점에서 조선일보는 정경 유착 사례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결국, 조선일보는 아주 세련되게 집권 세력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상이한 담론의 전개를 통해 권력 집단의 이해를 도모하는 이유는 '동의'와 '설득'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을 규합하고 이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키려는 담론의 속

성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조선일보는 이전의 정경 유착 사례들을 다루던 절차 그대로 ‘한보 사태’를 다루면서 ‘현실 유지’라는 보수적 기능을 실천하고 있다.

반면에 한겨레신문은 한보 사태의 성격을 정경 유착 사안으로 보고 있지만, 사건의 일차적인 원인을 권력 구조의 비정상성과 그를 통한 특정 개인의 권력 남용에서 찾고 있다. 한겨레신문이 한보 사건을 다룬 방식은 조선일보의 방식과 크게 다르다. 우선 조선일보가 문제의 원인을 정치권 일반의 부정부패에서 찾고 있다면, 한겨레신문은 김현철이라는 권력 최측근의 권력 남용 행위에서 찾고 있다. 즉 구체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런 사건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당시 정권의 권력 구조 재배치 및 구조 개혁이라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겨레신문이 명시적으로 제기하지는 않고 있지만 15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통한 권력 구조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한겨레신문은 ‘한보 사태’의 담론 변화를 통해서 대안적 권력 구조 창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조선일보 담론의 “현실 유지 기능”과 한겨레신문 담론의 “정권 교체를 통한 권력 구조의 개편”의 당위성에 대한 주장은 양 신문이 ‘한보 사태’를 통해 구성하고 있는 사회적 인지와 그 기능이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양 신문이 정경 유착 사건으로서 한보 사건을 다루는 방식에서는 유사했으나 조선일보는 여전히 이전의 정경 유착 사례들을 다루던 보도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고, 그런 담론 구성의 효과 역시 현실 유지 기능으로 이어졌다. 한겨레신문은 한보 사건을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계기로 삼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권력의 최측근에 위치하여 권력을 남용하고 비정상적인 국정 개입과 이권 개입을 일삼은 김현철 문제를 매개로 당시 정권 권력 구조의 문제를 다루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권 교체를 통한 권력 구조 개편의 당위성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조선일보의 특정한 양식으로 패턴화된 정경 유착 사례에 대한

보도 방식은 현실 유지라는 보수적 태도에서도 기인하겠지만 이미 이런 유형의 사안을 많이 접해본 독자 다수를 고려한 방식이기도 하다.

요컨대, 한보 사건이 조선일보에서 제기한 방향으로 처리된 것이 사실이고, 많은 독자들 역시 고비용 정치 구조의 문제 때문에 한보 사건이 발생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조선일보의 보수적인 현실 유지 기능을 하는 담론의 구성은 중대한 사회적 함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 김동민(1999), 「역사가 말하는 조선일보의 진실」, 『조선일보를 아십니까?』, 김민웅 외 9인, 개마고원.
- 김연중(1994), 「뉴스의 객관성과 언론의 사회적 책임: UR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31호, 한국언론학회.
- 백선기(1995), 『보도의 기호학』, 성균관대 출판부.
- (1999. 5), 「국회의원에 대한 일반 신화적 인식과 언론의 보도 태도와 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신문 보도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춘계 학술 대회 발표 논문.
- (1997), 『한국 선거 보도의 기호학』, 커뮤니케이션 북스.
- John Hartley(1982), *Understanding News*, Methuen & Co. Ltd.
- Norman Fair Clough(1994), *Discourse and Social change*, Polity Press.
- (1989), *Language and Power*, Longman.
- T. A. van Dijk,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Vol. 1~4, Academic Press.
- (1998), *News Analysi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1994), "Discourse and cognition in society," David Crowley & David

- Mitchell(eds.), *Communication Theory Today*, Cambridge: Polity Press.
- (1996), “Discourse as Interaction in Society,” T. A van Dijk(ed.), *Discourse as social Interaction*, SAGE Publications.
- (1997), *Discourse as Structure and Press*, SAGE Publications.
- (1991), “Interdisciplinary study of news as discourse,” Klaus Bruhn Jensen and Nicholas W. Jankowski(eds.), *A Handbook of Qualitative methodologies for mass communication research*, London and N.Y. Routledge.
- (1989), “Structure of discourse and Structure of Power,” *Communication Yearbook 12*, SAGE.
- (1988), *News as discours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1985), “Structures of News in the Press,” T. A. van Dijk (ed.), *Discourse and Communication: New approach to the analysis of mass media discourse and communication*, Walter de Gruyter.
- (1977), *Text and Context: Explorations in the Semantics and Pragmatics of Discourse*, Longman.